

최저임금 결정방식 확 뜯어고친다

노동계 표심 지나치게 의식한
기존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중기·자영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까지 면밀 분석

최저임금추 DB 구축 착수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사업주에도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 아래 근로자 표심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던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자 표심만을 의식해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던 과거의 구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A3면

4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 정보와 사업체 경영과 관련한 재무 정보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이 각 계층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연계해 데이터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주요 지표로 설정해서 논의했다. 하지만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래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례는 7번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도 오는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근로측과 사용자 측이 맞서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8.4%가 최저임금 동결·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인하를 주장한 자영업자는 11.2%에 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5.0%)와 비슷한 규모(5.9%)로 결정될 경우 자영업자의 절반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진한·성승훈 기자



아비규환...인도 3중 열차사고 300여명 사망

지난 3일(현지시간) 인도 오디샤주의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발라소르 방향가 바자르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한 객차들이 철로에 나뒹굴어 있다. 전날 오후 7시께 여객열차 2대와 화물열차 1대가 충돌하는 사고로 300명 이상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1995년 358명의 사망자를 낸 뉴델리 열차 충돌 사고 이후 인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참사다. 관련기사 A8면

로이터연합뉴스

韓日 ‘초계기 갈등’ 덮고 안보협력 가속

4년만에 한일국방장관회담
한미일 대북정보 실시간공유

한일 국방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양국 안보 분야 최대 쟁점인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정상회담과 서틀외교 복원에 이어 양국 간 안보 공조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2차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현지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양자회담을 한 것은 약 4년 만이다. 관련기사 A5면

국방부는 이날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소통을 증진해나기로 했다”며 “한일 국방당국 간 현안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 12월부터 5년 가까이 한일 안보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초계기 문제로 더 이상 시시비비를 다투지 않고 대북 공조 등 미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한일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해묵은 갈등 요소인 초계기 문제를 덮기로 하면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방위상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3자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한·미·일은 지난해 3국 정상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연동통제소를 중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각각 탐지한 발사 예상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을 올해부터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세 나라는 2018년 이후 중단된 해양차단 훈련과 대(對)해적훈련 등 3국 간 연합해상훈련도 모두 복원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앞서 오스틴 장관과 별도로 약식 회담을 하고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발사체를 인양해 한미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김성훈 기자

시민단체 ‘눈 먼 보조금’ 정부, 내년 5천억 삭둑

3년간 1865건, 314억 비리
투명성 제고위해 제도개선
국민 신고시스템도 활성화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사례를 적발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당장 내년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늘어난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의 눈먼 돈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A4면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3년간 총 6조80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인데 추가가 감사를 따라 부정·비리 적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대상은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과 선심성 사업이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구조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관해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제 예산을 집행한 단체의 증빙 내역을 들여다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전자증빙 기반 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고 출골 강조해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2016년부터 7년간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 명목으로 총 31조4000억원이 지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보조금 규모가 약 2조원 늘어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정부 각 부처가 적발한 문제의 사업은 총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해 전수조사로 이어졌다.

박윤균 기자

시멘트값 후폭풍...분양가 급등

쌍용 이어 성신양회도 14%↑
전국아파트 분양가 15% 올라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다. 기존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후폭풍으로 신규 공급 가격만 크게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A10면

4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현재 t당 10만5000원인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오는 7월부터 12만원으로 14.3%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레미콘 제조사들에 보냈다. 앞서 업계 1위인 쌍용C&E가 다 음달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가격 인상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올해 1분기 나란히 영업적자를 낸 두 회사가 가격 인상 카드를 먼저 꺼내든 만큼 나머지 5개 제조사도 조만간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재 가격 상승’ 탓에 서울·지방 구분 없이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있다. 5일 청약 일정에 돌입하는 광주광역시 ‘상무센트럴라이’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최대 9억2900만원(평당 28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53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 시장 전체에도 아랑곳없이 지난해 평균 분양가(1521만원)보다 15.3%(232만원) 급등했다.

정석환·양연호 기자

금융혁신 리더

B1~8면



국내 유일의
전미행정대학원연합회
(NASPAA) 인증

데이터사이언스,
금융·거시·경제 정책,
공공정책 등 10개 세부전공



800여개국 해외공무원,
국내공무원, 공공·민간 기업,
NGO 출신 등
최적의 학생 구성



국내외 인턴십 지원 및
리서치랩 연계 연구조교
기회 제공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최고의 교수진



변화의 시작,

KDI School,
where the difference begins

KDI국제정책대학원

2024 봄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모집안내

일반전형(석/박사)

2023. 8.28(월)~9.15(금)

특별전형(석사)

[1차] 10.10(화)~10.20(금) | [2차] 11.6(월)~11.17(금)

2024년 봄학기 석사/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 한국어/영어 과정 운영

- 주간 및 직장병행 주말야간과정 운영

- 모집전공: 정책학, 개발정책학/지식재산 및 개발정책학, 공공관리학